

월간

나라 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 Vol.12 / Nov. 2017

12

기획 특집

2018년 국가보훈처의
예산 중점 투자방향
이병구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

재정 논란

지방재정 자립을 향한 제언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재정이슈포커스

미국의 연방보조금(Federal grant)
정보공개와 한국
한승희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예산성과 우수사례

정부관리양곡 사료용 공급을
통한 관리비 절감
장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사무관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나라재정 배움터
국고금 관리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작 : ST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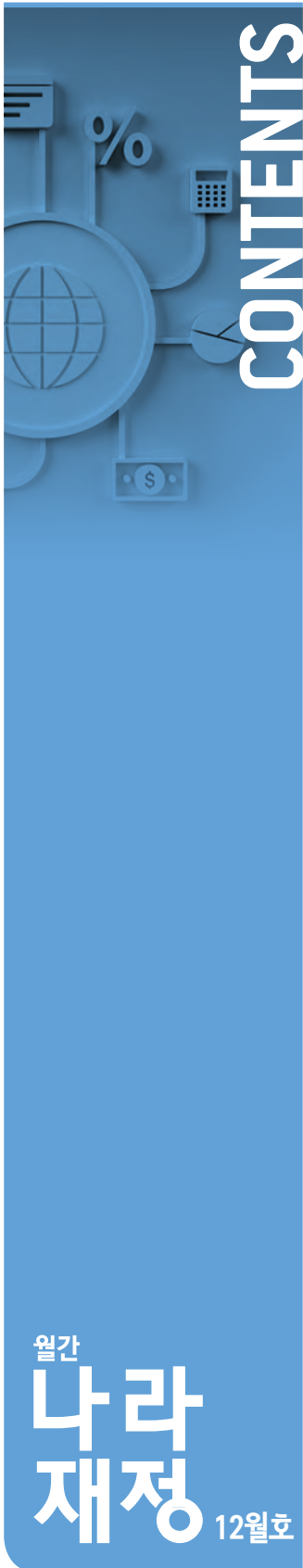
Global Finance Platform Builder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재정 전문기관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Vol.12 / December. 2017

기획 특집	06
2018년 국가보훈처의 예산 중점 투자방향	
이병구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	
재정 논단	18
지방재정 자립을 향한 제언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재정이슈포커스	24
미국의 연방보조금(Federal grant) 정보공개와 한국	
한승희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예산성과 우수사례	32
정부관리양곡 사료용 공급을 통한 관리비 절감	
장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사무관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36
나라재정 배움터	42
국고금 관리	
해외 재정 동향	48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56

MONTHLY

기획 특집 SPECIAL

기획 특집은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정책 방향 및 사업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PUBLIC FINANCE INFORMATION

06 /

2018년 국가보훈처의
예산 중점 투자방향

이병구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
bgl1963@korea.kr

SPECIAL



이병구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
bgl1963@korea.kr

2018년 국가보훈처의 예산 중점 투자방향

1. 2018년 예산의 전체 모습

총수입은 2017년보다 1.2% 증가한 2,244억 원이며, 총지출은 11.2% 증가한 5조 4,863억 원으로 역대 최고의 보훈예산을 편성하였다

프로그램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훈심사 및 보상’에 4조 2,094억 원, ‘보훈의료복지’에 8,306억 원, ‘보훈선양’에 1,316억 원을 배분하였다. 그 중 보훈선양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설로 2017년 대비 89.4% 증가하여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감면율 확대 등으로 보훈의료복지가 25.0% 증가하였다.

**보훈예산 11.2% 증가로
역대 최대 규모**

〈표 1〉 2018회계연도 보훈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17예산		2018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합계	49,320	49,333	54,863	5,530	11.2
보훈심사 및 보상	38,709	38,709	42,094	3,385	8.7
보훈단체지원	241	241	255	14	5.8
보훈의료복지	6,643	6,643	8,306	1,663	25.0
보훈선양	695	695	1,316	621	89.4
국립묘지	610	610	498	△112	△18.4
생활안정지원	723	725	635	△90	△12.4
제대군인	425	436	397	△39	△8.9
보훈행정	1,075	1,075	1,169	94	8.7
기금증식	199	199	193	△6	△3.0

* 총지출 기준

〈편집자 주〉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2. 2018년 예산 중점투자 방향

가. 독립·국가수호·민주유공자를 예우하고자 보상금과 수당 대폭 인상

보훈급여금은 2017년 3조 8,652억 원 대비 3,377억 원(8.7%) 증가한 4조 2,029억 원을 편성하였다. 보훈예산 중 보훈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6.6%로서, 보상금예산은 2017년 대비 5.3% 증가한 2조 7,438억 원, 수당은 2017년 대비 15.8% 증가한 1조 4,353억 원, 사망일시금을 포함한 수시보상금은 2017년 대비 10.7% 증가한 238억 원을 편성하였다.

〈표 2〉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주요 보상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17예산		2018예산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보훈급여금	38,652	38,652	42,029	3,377	8.7
보상금	26,047	26,047	27,438	1,391	5.3
수당	12,390	12,390	14,353	1,963	15.8
간호수당	581	581	555	△26	△4.5
생활조정수당	125	125	164	39	31.2
6.25자녀수당	2,238	2,238	2,356	118	5.3
고엽제수당	2,691	2,691	2,860	169	6.3
무공영예수당	608	608	722	114	18.8
참전영예수당	6,147	6,147	7,696	1,549	25.2
수시보상금	215	215	238	23	10.7
사망일시금	84	84	92	8	9.5
재해보상금	121	121	138	17	14.0
영주귀국정착금	10	10	8	△2	△20.0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지원을
위한 예산 증가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과 수당 지원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기는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소득수준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18년에는 2017년 물가상승률(1.9%), 공무원 보수 인상률(3.5%) 등 사회경제지표보다 1.5~3.1%p 높은 5.0%를 인상하였다. 이번 보상금 인상률 5%는 최근 8년동안 최고 인상률이다. 또한, 보상금과 연계한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의 단가도 각각 5.0% 인상하였다.

그림 1. 유사 연금 인상을 비교 (*는 추정치임)



또한,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76세로 고령인 점과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한다는 방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월 22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무공영예수당도 월 28~30만 원에서 월 36~38만 원으로 각각 8만 원씩 인상하였다.

〈표 3〉 최근 10년간 참전명예수당 인상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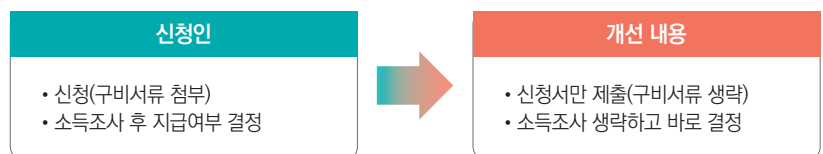
연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월지급액	8만 원	9만 원	12만 원	15만 원	17만 원	18만 원	20만 원	22만 원	22만 원	30만 원	30만 원
인상액	1만 원	-	1만 원	3만 원	-	3만 원	2만 원	1만 원	2만 원	2만 원	8만 원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도
대폭 인상

민주화의 공헌을 정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월 17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국가에 대한 희생도가 높은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금은 5.0%에서 2.0% 추가 인상하여 총 7.0% 인상하였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보훈가족 2,924명을 찾아서 지급한다. 종전에 제출하던 부양의무자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생략하고, 기초수급 확인서로 별도의 소득조사 없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였다.

그림 2. 생활조정수당 제도개선 주요내용



* 부양의무자 동의서 등 생략, 지급신청서 제출로 생활조정수당 지급('17. 10. 13. 고시 개정)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통해서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특별예우금을 50% 대폭 인상(월 105~155만 원→월 157.5~232.2만 원)하였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설하였다. 지원대상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자녀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자에게는 월 46.8만 원,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자에게는 월 33.5만 원을 지급한다.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특별예우금
50% 대폭인상하고,
후손 지원도 신설

〈표 4〉 2018년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4,677	4,677	57,221	52,544	1,123.5
애국지사특별예우금	948	948	1,133	185	19.5
(손)자녀생활지원금	0	0	52,581	52,581	순증
손자녀가계지원비	1,090	1,090	972	△118	△10.8

나. 보훈의료복지분야 사각지대 해소

보훈의료복지 예산은 보훈심사 및 보상 다음으로 전체 예산의 15.1%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분야로 2018년도는 취약분야 지원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고령이 된 참전유공자의 경

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상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위해 총 사업비 681억 원을 들여 2018년부터 지방보훈병원 4개소에 전문재활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으로, 2018년에는 광주와 부산 보훈병원에 종합재활센터 건립 예산 17억 6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그동안 서울보훈병원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수치료·로봇재활·심리재활 등 첨단화된 다양한 재활치료를 앞으로는 지방보훈병원에서도 제공하게 되었다.

〈표 5〉 보훈병원 전문재활센터 확충계획

병원별	1단계		2단계	
	광주	부산	대전	대구
사업개요	연면적 9,600㎡ 지상3층 150병상	연면적 9,002㎡ 지하1층, 지상5층 80병상	연면적 3,500㎡ 2개층 증축 40병상	연면적 3,306㎡ 지상2층 부지매입
사업기간	'18~'20년	'18~'20년	'20~'21년	'20~'22년

보훈섬김이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또한, 경기 서부 및 인천지역의 취약한 보훈의료시설 강화를 위해 인천보훈병원 건립 예산을 2017년 대비 14.5% 인상하였다. 2018년 인천보훈병원이 개원하게 되면 중앙보훈병원 진료인원이 인천보훈병원으로 분산되어 진료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권역 고령 보훈대상자에 대한 근거리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보훈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기금을 통해서도, 그동안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중 거동이 불편한 독거 및 노인부부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노후복지 지원사업을 보훈섬김이 등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여 독립유공자(손)자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보훈섬김이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나라를 위한 헌신이 보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재가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밑반찬, 이불세탁 등 기초생활을 지원하는 예산 332백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국가유공자의 노후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림 3. “찾아가는 보훈복지” 확대, “따뜻한 보훈” 시동



갑작스런 신체와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이 국가유공자와 순직 군경 유족이 쉽게 사회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회심리재활상담사를 지방보훈관서에 배치하기 위한 예산 226백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6개 보훈관서(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지방청, 인천보훈지청)에 시범 운영 후 앞으로 전국 보훈관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심리재활집중센터를 설치하여 심리전문가를 활용한 집중상담, 사례공유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증 및 집중케어 대상자의 심리안정을 유도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현재 전국 6개소(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에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노인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요양수요에 대응하고 보훈요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원권과 전북권에 신규로 요양원을 건립하여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8년에 강원권은 총사업비 366억 원 중 2년차 예산 105억 원, 전북권은 부지매입 및 설계비 등 20억 62백만 원을 반영하여, 증가하고 있는 보훈요양수요에 적기 대응할 계획이다.

보훈요양원을 추가적으로 신규 건립하여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할 계획

〈표 6〉 보훈요양원 건립 계획

구분	강원권 요양원	전북권 요양원
사업개요	연면적 10,515㎡ 지하1층~지상3층 200병상	연면적 10,515㎡ 지하1층~지상3층 200병상
사업기간	'17년~'19년	'18년~'20년
총사업비	366억 원	356억 원

다.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선양사업 추진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2018년부터 사전분위기 조성을 위해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2019년에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희망의 메시지 전달을 위해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국민 참여를 유도할 천만 릴레이 3·1 만세운동 재연행사인 '독립의 횃불'과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3·1운동 관련 지역별 수형기록 전수조사, 국제학술 포럼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서대문구의회 청사부지를 활용하여 총사업비 364억 원을 들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호남지역 호국기념관('16~'19년) 등 기 건립중인 시설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기억하는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표 7〉 주요 현충시설 기념관 건립 현황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호남지역 호국기념관]
• 사업기간 : '17~'20 • 총사업비 : 364억 원 •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 사업규모 : 기념관 1동 (지하 1층, 지상 5층)	• 사업기간 : '16~'19 • 총사업비 : 192억 원 • 소재지 : 전남 순천 • 사업규모 : 기념관 1동 (지하 1층, 지상 3층)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희망의 메시지 전달을
위하여 2018년부터
관련 사업 추진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여성 독립유공자(전체 독립유공 포상 중 여성 독립유공자는 1.97%)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독립운동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기 위한 여성 독립유공자 선양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전국에 산재한 노후·훼손된 현충시설의 개보수 및 관리를 위해 안내 인력(안내해설사, 지킴이), 지자체 및 민간과의 1학교·1사·1현충시설 결연 등을 확대한다. 국외 독립운동 유적은 현지 관리협력기관(20→22개) 및 명예관리자(5→10명)를 확대하여 보존 및 관리를 강화한다.

독립기념관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심 센터로 육성시키고자 예산 10억 원이 반영되었다. 이 사업은 중국·러시아 지역 미발굴 독립운동자료를 발굴, 판결문 등 재판기록 분석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독립유공자 서훈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름조차 확인이 어려워 독립운동발굴의 사각지대였던 의병과 여성 독립유공자 발굴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1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독립기념관의 자연 인프라에 기존 캠핑장 시설을 보완하고 ICT기술을 활용하여 역

사와 자연을 결합한 국내 유일의 독립운동 테마 캠핑장을 조성하여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야외활동과 역사적 체험을 함께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캠핑객 대상으로 1박 2일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여가와 역사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색 있고 의미 있는 교육 캠핑장으로 운영하고, 중앙 광장에 지역 생산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주말에 상시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급증하는 안장수요 적기 대처

현재 운영 중인 국립묘지의 만장에 대비하여 기존 국립묘지 내 안장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별 안장수요와 접근성 등을 감안해 중부권과 제주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을 추진한다. 기존 국립묘지의 안장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립대전현충원은 봉안묘 조성 완료에 이어 봉안당 5만 기 추가건립을 위한 예산 42억 3,700만 원, 국립이천호국원은 봉안당 추가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비 6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신규 국립묘지 조성을 위해 국립과산호국원은 2018년 개원을 목표로 마지막 공사에 힘을 쓰고 있으며, 제주국립묘지 조성을 위해 99억 7,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국립묘지 만장에
대비하여 기존 안장
시설은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신규조성도
추진

〈표 8〉 국립묘지 확충 및 신규 조성 현황

구분	기존 국립묘지 확충 (‘24년까지 100,000기)		신규 조성 (‘19년까지 60,000기)	
	대전현충원	이천호국원	과산호국원	제주국립묘지
안장규모	50,000기	50,000기	50,000기	10,000기
사업기간	‘17.~’20.	‘18.~’24.	‘12.~’18.	‘12.~’19.
총사업비	395억 원	596억 원	659억 원	526억 원

또한, 연 평균 60만명이 방문하는 국립5·18민주묘지에 참배객 대기실을 건립하여 유가족 편의를 증진하고 참배 집례 및 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2018년 5월부터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인 대구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승격된다. 국내 최대 독립유공자 묘역인 신암선열공원은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이천·영천·임실·산청)과 함께 국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게 된다. 대구 동구 신암동에 3만 6,800㎡ 규모로 조성된 이 공원에는 독립유

공자 52명이 잠들어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개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마.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강화

그동안 국가유공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위해 힘써왔으나, 최근 “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한 정신적 예우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예산을 2017년 대비 268% 대폭 인상하였다. 먼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이 보훈관에서 수령하던 영구용 태극기를 직접 전달해 드린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장례식이 초라하지 않고 마지막 가시는 길이 영예로울 수 있도록 200만 원 상당의 장례지원서비스도 지원한다. 그리고 국립묘지 외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의 유지·관리를 위해 연간 기당 2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사망 시 봉송¹⁾부터 안장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의전서비스를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산청)에도 신규 도입하여 운영한다. 의전단은 국립묘지 내 합동안장식에서 유족 안내, 헌화 지원, 영현 봉송 등을 담당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한, 참배행사 시 의전 도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안장자에 대한 스토리텔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립묘지 방문객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의전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이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서비스 지원

그림 4. 의전단 운영 전후 안장 및 참배 행사 비교

현 행		개 선		
안장행사		유족이 직접 봉송		의전단 봉송
		참배객 자율 참배		의전단 도열하 참배

1) 영령, 유골, 성물 따위를 정중히 운반함

바.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및 참전자 명예선양 사업 추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

먼저, 사업내용이 유사한 취업역량교육비와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현행 취업역량비(150만 원 범위 내, 전역예정자)와 직업교육훈련 바우처(120만 원 범위 내, 전역후 3년 이내 미취업 제대군인)제도가 지원액과 지원대상을 달리 운영하던 것을 취업역량비·바우처를 통합하여 15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함에 따라 더 많은 제대군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1사 1제대군인 채용확대를 위해 우수 민간기업 5,000개를 선정, 적극적인 기업협력 활동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군 경력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하여 빠르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UN참전국과 참전용사에게 감사하는 국제보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UN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재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방문이 어려운 UN참전용사에 대한 현지 위로행사와 후손 초청행사를 실시하며, 부산 UN기념공원 안장 및 유해봉환행사는 정부지원으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UN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재방한 프로그램을 운영

3. 맺음말

대통령께서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은 나라의 이름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고, 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 2018년 보훈예산은 금년대비 11.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 7.1%에 비해 4.1%p나 높은 수치로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확정된 예산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예우, 미래지향적 보훈선양사업 추진을 통한 국민통합,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2018년에는 여느해보다 보훈가족이 명예롭고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MONTHLY

재정 논단 OPINION

재정 논단은 정보와 정책 진단 및 제언 등
재정 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재정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장입니다.



PUBLIC FINANCE INFORMATION

18 / 지방재정 자립을 향한 제언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wanpark@cau.ac.kr

OPINION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wanpark@cau.ac.kr

수치로 본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은 열악

지방재정 자립을 향한 제언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는 현 정부의 중간평가 의미도 있고, 개헌안에 대한 투표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도 20년이 넘어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되었지만 과연 이에 걸맞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심성 공약,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나 재정 부담을 고려치 않은 비현실적인 공약들이 난무하고 선거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도, 추진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일이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수치로 본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자치단체 일반 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의 경우 2017년 예산기준 전국 평균은 53.7%이고 도는 38.3%, 시는 39.2%, 군은 18.8%, 자치구는 30.8% 등이다. 특히 군의 경우 일상적인 지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20%도 자체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이 늘어나면 재정자립도는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지방자치 시행 첫해인 1995년에 재정자립도가 63.5%이었던 것이 20여년이 지난 올해 53.7%로 10%p 가까이 하락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의존재원인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금의 급격한 증가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또 그동안 자치단체 스스로 세입 확충노력을 기대만큼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종업원분, 개인지방소득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많은 지방세목에 탄력세율 제도가 허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필요에 따라 표준세율보다 적용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한 사례는 상당히 드물었던 것이 현실이다. 설령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로 타지역 주민들에게 세 부담이 돌아가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하에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지방재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고리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국정목표)-“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국정전략)-“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국정과제)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8대 2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임기 내에 7대 3으로 올리고, 궁극적으로는 6대 4로 올릴 계획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2013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 것과 같이 특정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면 전체 조세수입에서 지방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릴 수가 있다. 그러나 전국 인구의 50%(2017년 기준), 사업체의 47%(2016년 기준)가 몰려있는 수도권으로 거의 모든 세목의 세수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도입된 것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이다. 이 기금은 2010년 종합부동산세 축소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및 지방 자주재원 강화를 위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의 35%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출연하여 비수도권 자치단체를 포함한 전 자치단체에

**문재인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

배분하는 것으로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세수입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세수 집중현상은 어떠한 국세도 마찬가지여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방세의 비중은 증가하지만 지역 간 세수 불균등 정도는 심화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형평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분배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와 세원을 공유하는 세원 재배분의 한 형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로 되어 있다. 이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교부하는 “세”이고,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인 것을 국가가 대신 징수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일종의 간접과징 형태의 지방세라 할 수 있다¹⁾. 또한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정자립도와 더불어 지방재정 상황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를 자주재원으로 분류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세외수입’에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된다.

이와 같은 지방교부세의 성격이나 기능을 감안할 때 지방교부세에 대한 분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세원 공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일반재원으로서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공동세로서의 지방세로 간주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중앙정부가 교부율과 배분공식을 정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 주장은 일리가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교부율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하여 조정하며, 배분공식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기구, 예를 들어 시도지사협의회와 시군구청장협의회가 지방의회 대표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는 것이다. 분명 처음 얼마동안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서서히 정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교부세의 성격,
기능을 감안할 때
지방교부세 분류를
재고할 필요**

1)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15.

이렇게 지방교부세의 성격을 다시 규정하면서 교부율을 적절히 상향조정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목표도 큰 저항이나 어려움 없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에 의하면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국세 총액이 감소하면 이는 지방교부세 재원의 감소가 되므로 당연히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액도 감소하는 연쇄효과가 존재하지만, 배분방식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면 국세에 연동한 배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연쇄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참고로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보면 그 이전까지는 구세이던 재산세를 50%는 특별시세로, 50%는 구세로 전환한 다음 특별시분 재산세는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구세로 본다. 또한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 내 25개 자치구에 교부하는바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해당 자치구의 재산세 세입으로 본다²⁾.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은 세입 측면에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세출 운용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자치단체의 수많은 낭비사례를 보아 왔다. 호화 청사 신축, 잘못된 수요예측에 의한 경전철 건설과 리조트 건립, 무리한 국제행사 추진 등을 통해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다양하다. 자치단체장의 공약 때문일 수도 있고, 재선·3선을 겨냥한 전시행정 때문일 수도 있다. 어찌 되었거나 그러한 부실사업으로 인해 현재와 미래 주민들 모두 재정 부담을 떠안는 동시에 가용재원 부족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여러 사업들을 시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사업들은 시작하기 전에 걸러져야 한다. 1,000억 원을 낭비했다고 평가되는 월미은하레일, 매년 200억 원의 적자보전을 해야 하는 용인 경전철,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 매년 400억 원의 적자보전 대상인 김해 경전철 등과 같이 부실사업들이 완료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사전적 재정관리제도의 하나로서 투자심사제도가 존재한다. 규모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심사하기도 하고, 시·도 등 상급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의해 의뢰심사를 받기도 한다. 자체심

**재정자립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세출 운용노력이
반드시 필요**

2)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15.



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서 재정자립에 기여

사의 경우 ‘적정’이나 ‘조건부 추진’ 등 긍정적인 결과가 거의 90%에 도달할 정도로 선별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심사 시 첨부자료 중 하나인 타당성조사 결과는 용역의 형태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주로 민간업체 또는 민간연구기관에게 발주하기 때문에 소위 ‘을’인 연구용역기관이 ‘갑’인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본원적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만 부실 사업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다. 한 가지 제안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사업들에 대해서 현재 광역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원(예를 들어,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산하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엄격하게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치단체 간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도 재정자립에 기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지역 간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중복투자가 만연되어 있다. 인접지역 간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중복투자는 물론 문예회관, 테마파크, 각종 축제행사 등 면밀한 수요조사 없이 벌여놓은 사업들로 인해 적지 않은 자치단체들이 입장료 등 수입은 거의 없이 유지관리에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는 사례들이 허다하다. 광역자치단체들이 제각각 만들고 있는 안전체험관의 경우도, 기왕 만들려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콘텐츠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비하여, 궁극적으로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비

록 서로 다른 자치단체라고 할지라도 물리적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다면 두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건설비도 절약되고 유지관리비도 절약되어 국가적으로 상당한 예산 절약을 가져올 수 있다.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국고지원 인센티브를 주어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의 침체는 세입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 하락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인구유출이 발생하면 다시 지역경제 침체의 심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재정자립에 한발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해당 지역에서 어느 분야의 공공지출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지를 파악한 다음, 이 분야 지출로의 선택과 집중을 시도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즉, 보육이나 노인에 대한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대한 구축효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나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의 증가, 더 나아가 이들의 고용확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밖에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통해서 낭비성·전시성 사업들이 걸러질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확정, 지방채 발행,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등 재정운영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결하거나 보고를 받는다. 따라서 의회 의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한다면 부실·부적정 사업을 사전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들에게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주민들은 자신이 내는 세금의 가치(value for money)를 의식하면서 공적 재원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낭비는 없는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고 재정자립의 실현에도 한발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주민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정자립의
실현이 가능**

미국의 연방보조금(Federal grant) 정보공개와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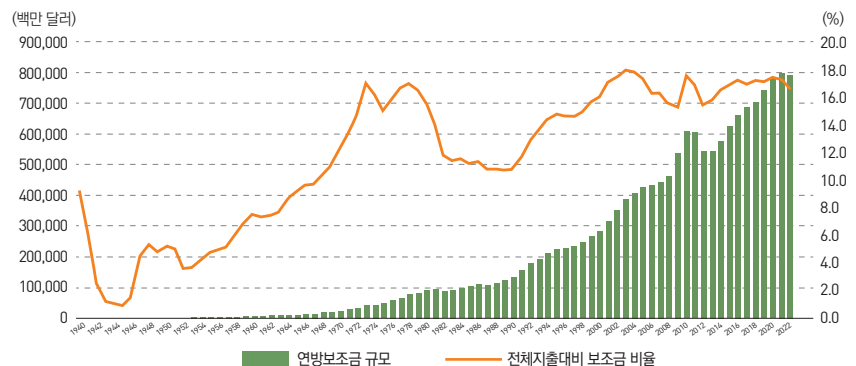
미국은 1999년 전후로 꾸준히 연방보조금(Federal grant)과 관련된 법·제도, 조직, 시스템 측면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grant.gov와 usaspending.gov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공개를 확대하였다. 한국도 지난 2014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구축, 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정 등 법·제도, 시스템 측면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e나라도움 홈페이지(gosims.go.kr)를 통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였다.

미국과 한국의 보조금
정보공개는 개혁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이처럼 미국과 한국의 보조금 개혁은 유사성이 있는바, 그 중에서 미국의 정보공개 방식을 검토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미국의 연방보조금 규모

그림 1. 미국의 연도별 연방보조금 규모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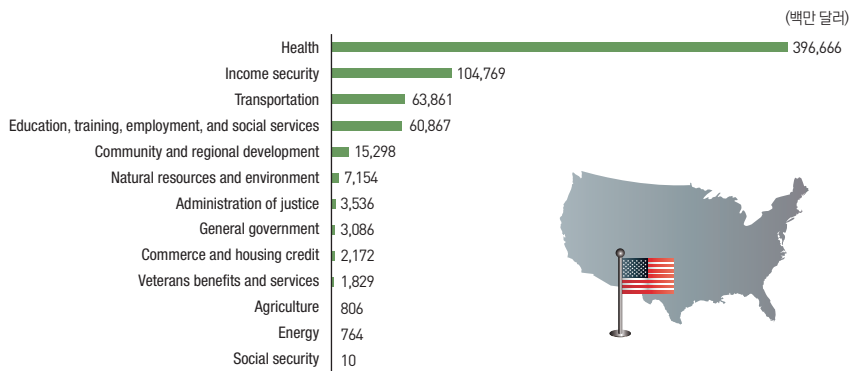
한승희 부연구위원
shhan@kpfis.kr

자료 :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www.whitehouse.gov)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구성

[그림 1]은 1940년대부터 미국의 연도별 연방보조금 규모와 전체정부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연방보조금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연방보조금은 1940년대 약872백만 달러에서 2017년 660,818백만 달러로 약 757.8배 증가하였다. 이 그래프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방보조금 규모의 예측치도 나타내고 있으며, 2016년 이후로도 보조금 규모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연방정부 지출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978년 17%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감소추세를 보인 이후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2016년도 미국의 분야별 연방보조금 규모



자료 :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www.whitehouse.gov)

미국의 연도별
연방보조금 규모는
증가추세를 보임

미국은 에너지, 천연 자원과 환경, 농업, 상업, 교통, 지역개발, 교육, 건강, 소득보장, 퇴역군인, 법무, 일반정부로 총 13개 분야(function)로 분류하고 있다. 2016년도 각 분야별 연방보조금 규모를 보면, 건강(health) 분야에 약 396,666백만 달러로 가장 많은 연방보조금이 배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88년 건강 분야는 약 32,586백만 달러로 소득보장(Income security) 분야의 규모(약 32,657백만 달러)와 유사하였으나 그 이후로 2016년까지 12.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미래에도 건강 분야의 연방보조금 규모는 증가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 분야의 연방보조금 규모가 큰 원인은 메디케이드(Medicaid) 보조금 때문이다. 메디케이드 보조금은 2016년 건강 분야 연방보조금 중 약 92.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제도는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을 위한 미국의 국민의료보조제도이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의료비를 지원하

며 주정부가 운영하고 있다. 건강 분야 다음으로 소득보장, 교통, 교육, 지역 개발 순으로 연방보조금 규모가 크다.

2. 미국의 연방보조금 개혁 과정과 정보공개

미국은 1999년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을 시행하여 보조금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조금 수령자들의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려고 하였다. 특히, 다수의 연방정부기관에게 보조금을 받는 수령자들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였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의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은 '보조금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금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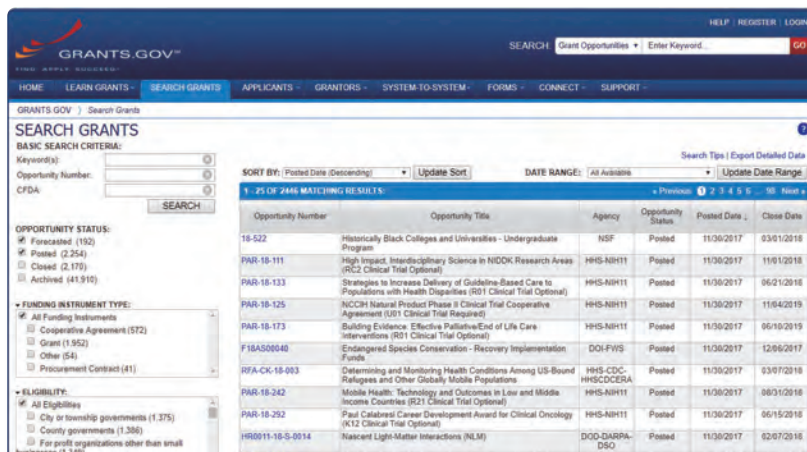
또한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보조금정책위원회(Grants Policy Committee: GPC)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보조금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연방 정부기관이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하는지를 감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2년에는 연방정부기관의 고위관리자들로 구성된 보조금집행위원회(Grants Executive Board: GEB)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Grants.gov 홈페이지를 감독하고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2003년 Grants.gov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국민이 어떤 연방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검색하고 이 홈페이지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 수령자의 행정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3]은 미국의 Grants.gov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수령자가 받을 수 있는 연방보조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Opportunity status(Forecasted, Posted, Closed), Funding Instrument Type(Cooperative Agreement, Grant, Procurement Contract), Eligibility(State governments, Country governments, City or township governments, Individuals 등), Category(Health, Income Security and Social Services, Education 등), Agency(All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ll National Science Foundation, All department Energy-Office of Science) 등으로 카테고리화 되어 있어 자신

Grants.gov 홈페이지
에서 통합적인 보조금
정보제공 및 신청 가능

이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All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를 클릭하면 그 카테고리에 속한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등 소속 기관 항목이 세분화되어 나타난다.

그림 3. 미국의 연방보조금 정보공개



미국은 USAspending.gov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출처 : 미국 Grants.gov 홈페이지(www.grants.g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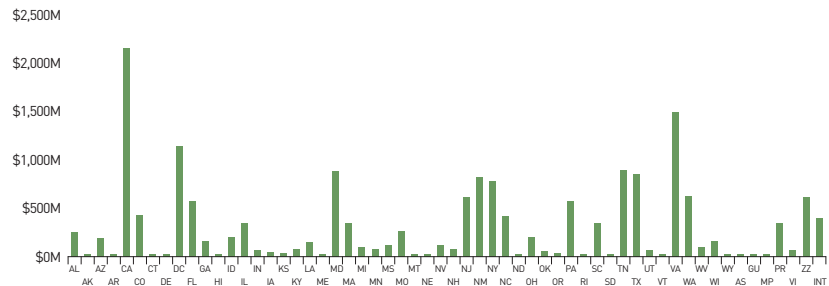
미국은 또한 2006년에 보조금 신청, 선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USAspending.gov 홈페이지를 통해 연방보조금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였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홈페이지에서 각 주별 보조금 규모를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¹⁾. [그림 4]를 보면, 2018년도 캘리포니아 주의 보조금 규모가 2,239 백만 달러로 가장 크며, 그 다음은 버지니아 주가 1,536 백만 달러로 두 번째로 그 규모가 크다.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각 연도별 주(state)가 수령한 보조금 규모도 공개하고 있어, 특정 주의 보조금 규모의 증감도 파악할 수 있다.

각 주별 보조금 규모를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USAspending.gov의 where is the money going 세션에서는 각 주별로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

1) USAspending.gov의 새로운 버전인 beta.usaspending.gov 사이트는 인포그래픽 측면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보조금이 어떤 분야, 부문에 지출되는지 알 수 있게 구성하였다.



그림 4. 미국의 각 주(state)별 보조금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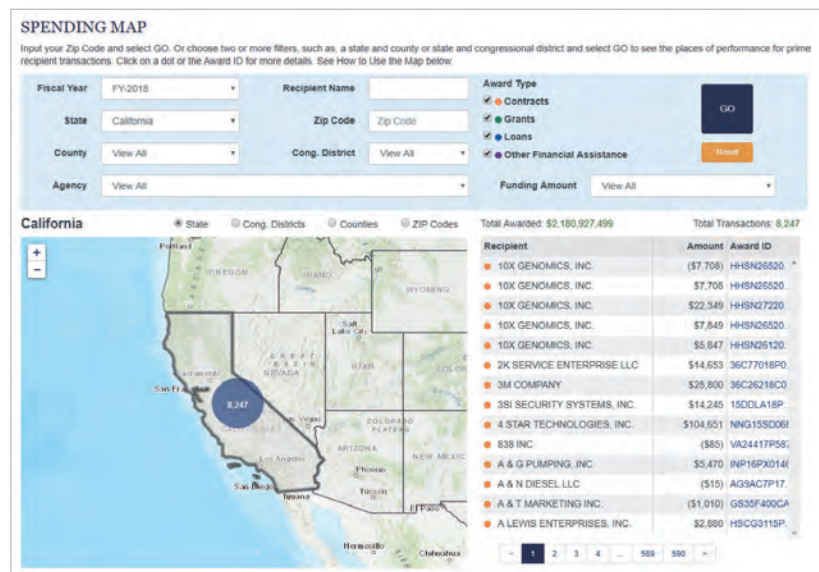


자료 : USAspending.gov 홈페이지(<http://usaspending.gov>)

업자의 이름과 금액도 정보공개하고 있다. [그림 5]를 보면, 캘리포니아 주의 각 유형별(Contracts, Grants, Loans 등)로 연방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와 보조금액, 보조금 ID가 공개되고 있다.

미국은 각 주별 보조금 규모 및 보조사업자 정보를 공개

그림 5. 미국의 각 주별 보조사업자 및 지원 규모



자료 : USAspending.gov 홈페이지(<http://usaspending.gov>)

그 이외에도 2009년에는 보조금 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경기부양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Recovery.gov 홈페이지와 FederalReporting.gov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조금 데이터를 공개하였다. 이 법에 따라 경기

부양책임성 및 투명성위원회(Recovery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Board)도 설립되어 보조금의 부정 및 남용을 막고 문제 발생 시 이를 조정하고 감시하도록 하였다.

〈표 1〉 미국의 연방보조금 개혁

연도	내용
1999	- 연방재정지원관리개선법 시행 - 보조금정책위원회(GPC) 설립
2002	- 보조금집행위원회(GEB) 설립
2003	- Grants.gov 구축 및 오픈
2004	- 보조금사업관리부(GMLOB) 설립
2006	- 연방자금책임성 및 투명성 법(FFATA) 시행 - USAspending.gov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정보 공개
2009	- 미국경기부양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시행 - Recovery.gov와 FederalReporting.gov 정보공개
2011	- 재정지원개혁위원회(COFAR) 설립
2012	- 보조금 편람 개혁(Grants Circular Reforms)

※출처 : GAO(2013)

한국의 보조금 개혁은
주로 중복/부정수급
방지에 목적을 두고 추진

3. 한국의 보조금 개혁과 정보공개

한국의 국고보조금 개혁은 주로 중복/부정수급 방지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한국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심각성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었다. 감사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2013년 8월) 결과 부정수급 2,300억 원 적발, 검찰·경찰 합동조사(2014년 1월) 결과 부정수급 3,200억 원 적발 및 253명 구속 등 언론을 통해서 연일 보조금 부정수급 사태가 보도되었다. 정부는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보조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부정수급 방지체계를 만들었다. 실시간 온라인 지출증빙으로 허위, 중복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조금 신청 시 사업자가 동일 사업을 신청하였는지를 시스템을 통해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조사업 추진절차 전반에 걸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다. 선지급·후정산 체계에서 선시

행·후지급 방식으로의 변화로 개혁하여 사업시행 전에 돈을 받고 연말에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였다.

e나라도움 시스템 내에 축적된 데이터를 정리하여 e나라도움 홈페이지(gosims.go.kr)를 통해 공개하였다.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는 [그림 6](왼쪽)과 같이 수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나이, 성별, 지역, 주제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 쉽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을 내역사업, 보조사업 단위로 찾을 수 있다. 관심있는 보조사업을 검색하면, 바로 사업명, 주관부처, 사업연도, 사업기간, 사업목적, 당해연도 사업비, 주요사업내용, 지원 대상 및 조건,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림 6. 한국의 보조금 정보공개

한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국고보조금 통계 및 수령가능한 보조금 정보 등을 공개



자료 :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gosims.go.kr>)

또한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통계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분야별 국고보조금 예산 및 집행현황, 연도별 국고보조금 추이, 지출현황, 분야·부문별 및 중앙부처별 보조사업자 추이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e나라도움의 속성정보를 활용하여 생애주기별, 경제활동별(사회초년생, 근로자/직장인,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축산업인, 워킹맘, 실직자/구직자, 창업자, 자영업자), 기업규모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성별, 소득기준별(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소득하위 5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긴급지원대상, 기타취약계층, 소득 무관), 교육단위(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기타), 가구구성유형별(다문화 가족, 이주배경청소년, 새터민, 한부모, 신흥부부, 임신·출산, 소년·소녀가장 등), 서비스유형별(행정/통일/외교, 사

회복지, 문화활동, 보건/의료, 안전보장, 교육보장, 관광/휴양활동, 환경 등)으로 지원현황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6](오른쪽)은 2017년 국고 보조금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에게 지원되는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집단 구성원 대비 보조금 지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의 정보공개 방식과 유사하게, 한국도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제1항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제외)에게 정보공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는 2016년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정보공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사업정보,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내역, 정산보고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특히, 지출내역에서는 보조비목과 세목 및 주된 집행처 등을 게시해 미국의 정보공개 방식보다 더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도 미국의 보조금 개혁과 유사하게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 정보 공개를 확대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미국은 보조금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조금 수령자들의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었던 반면, 한국은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개혁을 추진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미국의 정보공개 방식의 장점을 수용하여 e나라도움(gosims.go.kr) 홈페이지를 통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의 각 주별 보조금 투입 규모 및 보조사업자를 공개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보조금 정보공개 방식처럼, 내가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을 검색하면 관련 링크를 따라 바로 관련 보조금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즉, 국민들이 내가 신청할 수 있는 보조사업명을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알게되면, 재검색하지 않고 e나라도움 홈페이지 링크(link to additional information)를 클릭하여 바로 관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수령자의 행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한국도 보조사업자
정보를 공시하는 등
보조금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노력

참고 문헌

- GAO(2013). Grants Management: Improved Planning, Coordination, and Communication Needed to Strengthen Reform Efforts.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장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사무관
rose1939@korea.kr

정부관리양곡 사료용 공급을 통한 관리비 절감

• 시간 :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1970년대 초반 해도 「식품위생법」에 ‘무미일(쌀을 먹지 않는 날) 지키기’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음식점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5회 이상 쌀밥을 팔지 못하고, 잡곡도 20~30% 섞어야만 했다. 그만큼 쌀은 귀한 존재였다. 그러나 50여 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에는 생활의 다양화 등에 의한 소비량 감소, 시장 개방에 따른 공급량 증가 등 각종 이유로 재고가 쌓이면서 정부가 처리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로 뒤바뀌게 되었다. 농부들이 정성껏 키운 쌀이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재고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다 보니 농부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과다하게 쌓인 쌀 재고를 적정량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관리양곡의 새로운 수요처로서 사료용을 발굴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장미 사무관을 만나 신(新) 수요처 발굴로 인한 정부관리양곡 재고 감축과 관리비 절감 성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장미 사무관입니다. 2015년 5월부터 2년 6개월 정도 정부양곡관리와 쌀 유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관리양곡 재고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요처 발굴로 재고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양곡을 관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정부관리양곡’이란 「양곡관리법」 제2조에 의해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간으로부터 양곡을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공공비축미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쌀의 작황여부는 기후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인터뷰】

김도일 연구원
doylek@kpfis.kr



데, 흉년으로 식량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비축해 두었던 공공비축미곡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관리하게 됩니다.

비축된 정부관리양곡은 군·관수용, 학교급식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기초생활 보장시설, 쌀 가공업체, 주정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판매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일반 시중 유통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Q 정부관리양곡의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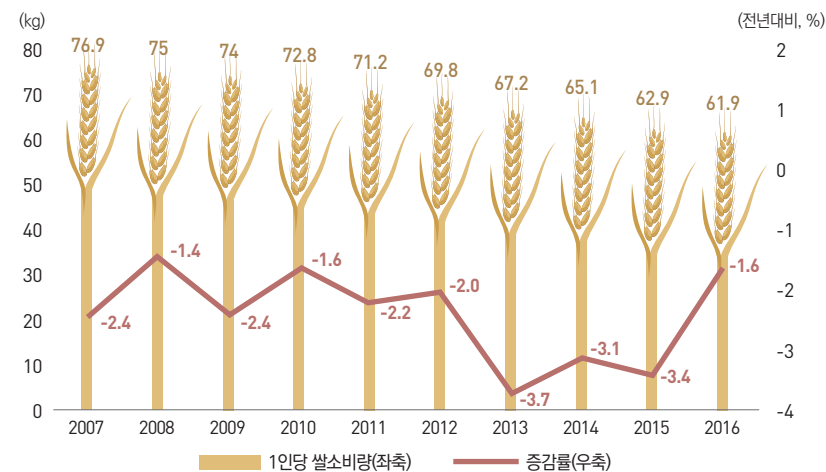
A. 정부관리양곡 비축량은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이하 FAO)가 권장하는 적정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FAO는 국가 내에서 두 달 간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적정재고량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80만 톤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기상 여건 호조에 따라 풍년이 지속되다 보니 정부가 수급조정을 위한 시장격리곡 20~30만 톤을 매년 매입하면서 재고량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반면 쌀 이외의 식품으로 식사를 대체하거나 잡곡 등 기타 곡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을 살펴보면 2007년 76.9kg에서 2016년 61.9kg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와 수요 감소가 맞물린 결과, 정부관리양곡은 2015년 12월말 기

**우리나라 정부관리
양곡 비축량은
적정재고량(80만 톤)을
크게 상회한 190만 톤
수준**

준 190만 톤 수준으로 적정재고량의 2.4배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과다한 재고로 보관에 소요되는 창고료 등 보관료뿐만 아니라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면 연간 약 1,849억 원의 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쌓여가는 재고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림 1. 1인당 쌀 소비량 추이



자료 :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2016)

농림축산식품부는
과다한 재고량 감축을
위해 오래묵은 쌀을
가축에게 공급하는
아이디어 제시

Q 사업추진 과정 및 재정개선효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농촌진흥청의 2011년 자료에 의하면, 쌀은 통상적으로 수확 후 저장기간이 3~5년이 경과되면 신선도와 품질이 저하되고 지방산도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오래된 쌀일수록 고미취 및 이취가 발생하여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고감축을 위해 국회,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선입선출의 원칙에 의해 오래된 묵은 쌀을 가축에게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가축에게 먹이로 준 사례가 없어 사업추진 초반에는 과연 가축이 쌀이 들어간 사료를 잘 먹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종별 배합사료의 시제품 제작 및 실험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결과 사료용 쌀 9만 1천 톤(쌀 기준) 공급을 통해 보관료, 금융비용 등 소요되는 관리 비용 137억 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 등 사료 곡물의 수입대체 기대효과로 추정되

는 203억 원을 포함하여 총 340억 원의 재정개선이 기대됩니다.

Q 사람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한 쌀 공급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생 가능한 문제 및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료용 쌀은 사람이 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곤란한 오래된 묵은 쌀이지만, 위낙 공급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시중에 부정 유통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식용 쌀이 1kg당 1,700원인 반면 사료용 쌀은 1kg당 200원에 불과해 8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구곡(舊穀과) 신곡(新穀)을 섞는 경우에는 티가 별로 나지 않아 이러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업시행 초반에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등 관련기관을 동원하여 사료용 쌀 사용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감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료용 쌀을 전량 파쇄 후 공급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부정유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Q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업무 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쌀 재고량 감축을 위해 묵은 쌀을 가축용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과거에도 두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식인 쌀을 가축용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시작된 쌀의 사료용 공급은 재고감축의 포문을 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쌓여가는 시장격리곡과 수입량 증가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가는 앞으로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해외원조 확대 등 지속적인 수요처 발굴로 정부양곡재고감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표 1〉 정부관리양곡 및 시장격리곡 재고량 추이

(단위: 만 톤)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정부관리양곡 재고량	75	84	135	170
시장격리곡 매입량	-	24	3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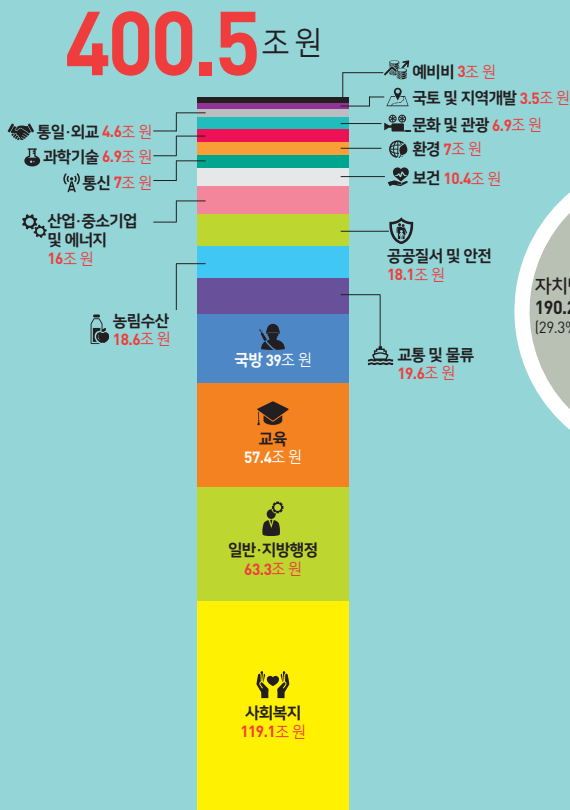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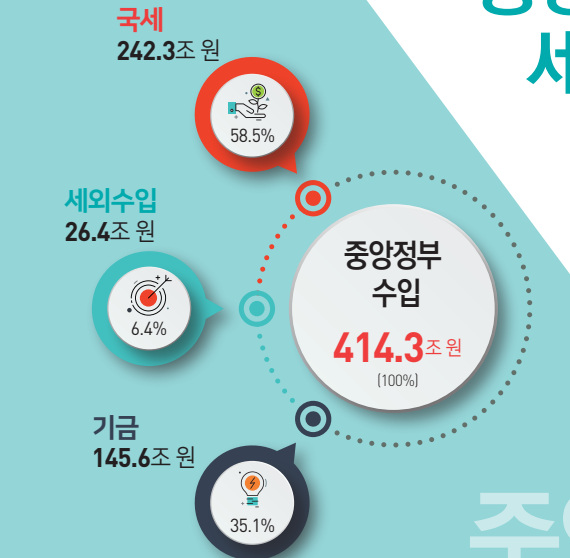
* 재고량 : 양곡연도말(10월말) 기준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료용 쌀을 전량 파쇄 후 공급하여 부정유통 가능성을 원천 차단

중앙과 지방의 세입·세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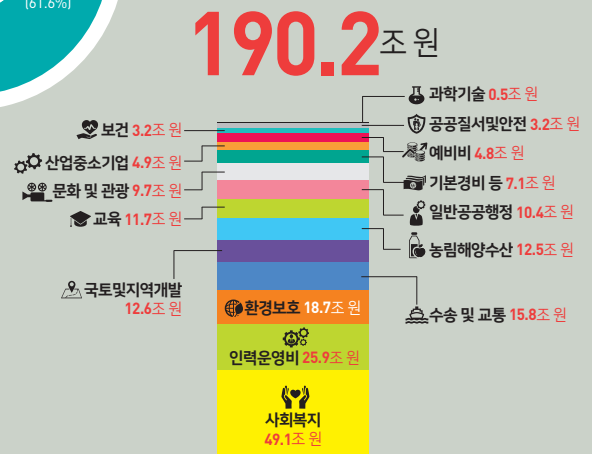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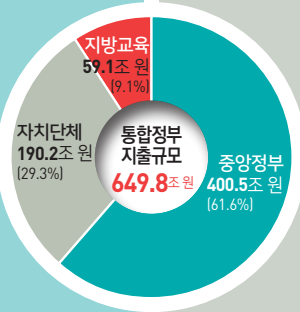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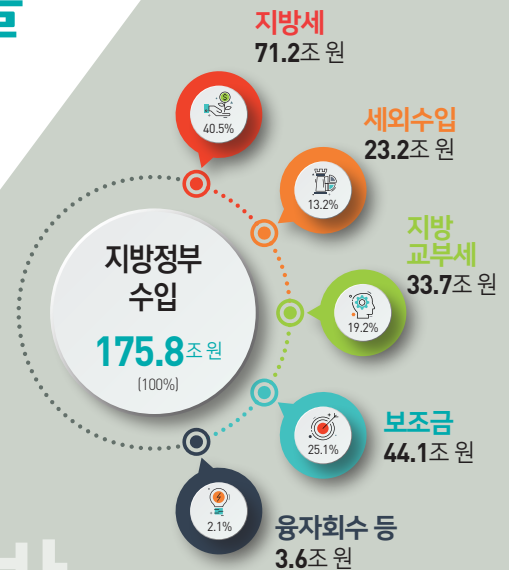
(2017년 기준)



중앙정부 지출

※주: 총수입, 총지출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2017년도 나라살림 예산)



지방정부 지출

※주: 통합재정수입, 통합재정지출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365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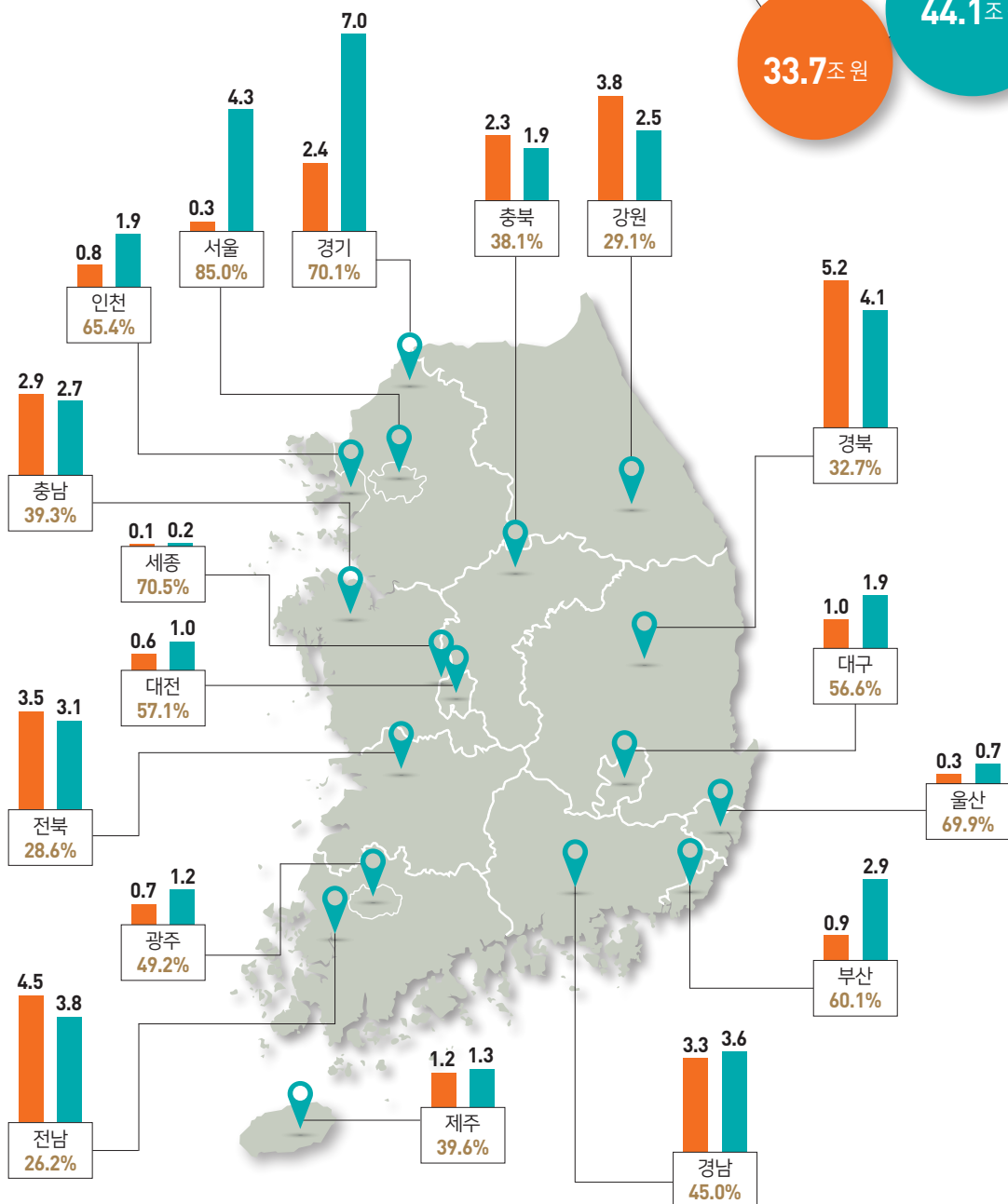
지역별 재정자립도 및 이전수입 현황(2017년 기준)

전국

53.7%

44.1조 원

33.7조 원



■ 보조금 (조 원)

■ 지방교부세 (조 원)

□ 재정자립도 (자체수입/자치단체예산규모) × 100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1.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있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 외수입)의 일반회계 대비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재정자주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나타낸다. 재정자립도가 재원 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 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보여주는 것이다¹⁾.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고, 재정자주도는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1)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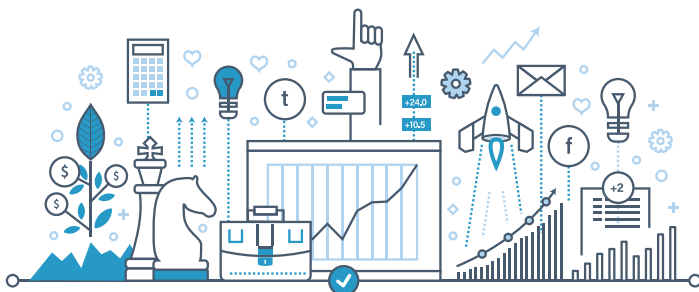
【작성】

김명규 부연구위원
mkim@kpfis.kr

김상기 연구원
sgkim@kpfis.kr

조현희 연구원
hyunheecho@kpfis.kr





2017년 재정자립도 전국평균은 53.7%이다. 서울특별시가 85.0%로 가장 높고, 세종특별자치시 70.5%, 경기도 70.1% 순이다. 반면 전라남도 26.2%, 전라북도가 28.6% 순으로 낮았다.

〈표 1〉 2017년 지역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단위 : 조 원, %)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A)	자치단체예산규모(B)	재정자립도(A/B)
전국	84.6	157.7	53.7
서울	19.0	22.3	85.0
부산	5.2	8.6	60.1
대구	3.5	6.1	56.6
인천	4.8	7.4	65.4
광주	1.7	3.5	49.2
대전	1.9	3.3	57.1
울산	2.4	3.5	69.9
세종	0.7	0.9	70.5
경기	20.3	29.0	70.1
강원	2.5	8.6	29.1
충북	2.5	6.6	38.1
충남	3.5	8.9	39.3
전북	2.5	8.7	28.6
전남	2.9	11.0	26.2
경북	4.4	13.6	32.7
경남	5.4	12.0	45.0
제주	1.4	3.6	39.6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 당초예산, 기금제외, 순계), 2017. 11. 30.

재정자립도 전국평균은
53.7%이며, 재정자립도
전국평균은 74.9%

2017년 재정자립도 전국평균은 74.9%이다.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로 86.2%이고, 그 다음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80.1%), 울산광역시(78.5%)이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역시 전라남도(67.2%)와 전라북도(68.1%)가 가장 낮았다.

〈표 2〉 2017년 지역자치단체별 재정자주도

(단위 : 조 원, %)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A)	자주재원(B)	자치단체예산규모(C)	재정자주도((A+B)/C)
전국	84.6	33.5	157.7	74.9
서울	19.0	0.3	22.3	86.2
부산	5.2	0.9	8.6	70.1
대구	3.5	1.0	6.1	72.7
인천	4.8	0.8	7.4	75.9
광주	1.7	0.7	3.5	68.8
대전	1.9	0.6	3.3	74.3
울산	2.4	0.3	3.5	78.5
세종	0.7	0.1	0.9	80.1
경기	20.3	2.4	29.0	78.3
강원	2.5	3.8	8.6	73.0
충북	2.5	2.3	6.6	73.3
충남	3.5	2.9	8.9	72.2
전북	2.5	3.5	8.7	68.1
전남	2.9	4.5	11.0	67.2
경북	4.4	5.1	13.6	70.5
경남	5.4	3.3	12.0	72.6
제주	1.4	1.2	3.6	71.8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 당초예산, 기금제외, 순계), 2017. 11. 30.

2017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193.2조 원이고,
이전수입은 77.8조 원

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민주적이고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지역간 재정형평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193.2조 원으로, 수입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71.2조 원(36.9%), 보조금이 44.1조 원(22.8%), 지방교부세가 33.7조 원(17.5%) 만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재원²⁾(이전수입)으로, 이전수입은 77.8조 원(40.3%)이다.

2) 월간 「나라재정」 10월호 참조

〈표 3〉 지방자치단체 항목별 세입예산

(단위 : 조 원, %)

연도	세입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이전수입			지방채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소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2014	163.6	54.5 (33.3)	20.6 (12.6)	69.3 (42.3)	31.6 (19.3)	37.7 (23.0)	4.9 (3.0)	14.4 (8.8)
2015	173.3	59.5 (34.3)	20.2 (11.7)	73.4 (42.4)	31.6 (18.2)	41.8 (24.1)	4.8 (2.8)	15.4 (8.9)
2016	184.6	64.8 (35.1)	21.8 (11.8)	75.0 (40.6)	32.0 (17.3)	43.0 (23.3)	3.8 (2.0)	19.2 (10.4)
2017	193.2	71.2 (36.9)	22.3 (11.6)	77.8 (40.3)	33.7 (17.5)	44.1 (22.8)	2.3 (1.2)	19.5 (10.1)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 당초예산, 기금제외, 순계), 2017. 11. 30.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전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9.4조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그 뒤로 경상북도(9.3조 원), 전라남도(8.3조 원) 순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입에서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라남도(69.2%)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뒤로 전라북도(66.7%), 강원도(65.6%)가 있었다.

이전수입의 규모는
경기도가 9.4조 원으로
가장 크고, 세입에서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라남도가
69.2%로 가장 높음

〈표 4〉 2017년 지방자치단체별 이전수입

(단위 : 조 원, %)

지방 자치단체	세입	소계		이전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전국	193.2	77.8	(40.3)	33.7	(17.5)	44.1	(22.8)
서울	30.0	4.6	(15.1)	0.3	(0.9)	4.3	(14.2)
부산	10.8	3.8	(34.4)	0.9	(8.0)	2.9	(26.4)
대구	7.5	2.9	(38.3)	1.0	(13.0)	1.9	(25.3)
인천	9.3	2.7	(29.3)	0.8	(8.5)	1.9	(20.8)
광주	4.2	1.9	(45.4)	0.7	(16.5)	1.2	(28.9)
대전	4.0	1.6	(39.9)	0.6	(14.7)	1.0	(25.2)
울산	4.2	1.0	(24.8)	0.3	(7.5)	0.7	(17.3)
세종	1.2	0.3	(27.7)	0.1	(7.6)	0.2	(20.1)
경기	38.8	9.4	(24.4)	2.4	(6.3)	7.0	(18.1)
강원	9.5	6.3	(65.6)	3.8	(39.9)	2.5	(25.7)
충북	7.4	4.2	(56.5)	2.3	(31.6)	1.9	(24.9)
충남	10.3	5.6	(54.9)	2.9	(28.6)	2.7	(26.3)
전북	9.8	6.6	(66.7)	3.5	(35.3)	3.1	(31.4)
전남	12.0	8.3	(69.2)	4.5	(37.5)	3.8	(31.7)
경북	15.6	9.3	(59.4)	5.2	(33.1)	4.1	(26.3)
경남	14.2	6.9	(48.9)	3.3	(23.5)	3.6	(25.5)
제주	4.3	2.5	(57.2)	1.2	(27.6)	1.3	(29.5)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 당초예산, 기금제외, 순계), 2017. 11. 30.

국고금 관리

Q1 국고금이란 무엇인가요?

『국고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국고금은 정부가 공공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달하고 운용하는 일체의 현금을 말합니다. 국고는 국가를 재산권의 주체로 간주하는 경우 현금뿐 아니라 유가증권, 부동산 등도 국가의 재산에 해당하지만, 국고금은 이 중에서 현금만을 말합니다.

Q2 국고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국고금은 수입금, 조달자금, 운용 금융자산, 일시보유 지방소비세, 기타의 국고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현금 또는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조달자금은 정부 수입과 지출이 일정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달자금은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운용 금융자산은 국고금에서 지출에 충당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금융자산형태를 말합니다. 일시보유 지방소비세는 정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현금을 말합니다. 기타 국고금은 통합계정상의 상호예탁 및 운용과 결산상 잉여금의 처분 등을 말합니다.

Q3 국고금의 수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고금의 수입은 조세 등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부담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고에 포함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국고금’이라고 부르고, 이전까지는 ‘수입금’이라고 부릅니다. 수입이 국고에 수납되는 절차는 수입징수관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세자는 국고금 업무를 대행하는 국고대리점¹⁾에 납부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당일 납입 받은 내

국고금은 수입금,
조달자금, 운용 금융
자산, 일시보유
지방소비세, 기타의
국고금으로 구분

【작성】

김명규 부연구위원
mkim@kpfis.kr

1) 국고대리점은 국고금 업무를 대행해서 처리하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역을 본사에서 취합한 후 한국은행에 다음 영업일 오전까지 전송하는 것으로 수입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림 1. 국고금 수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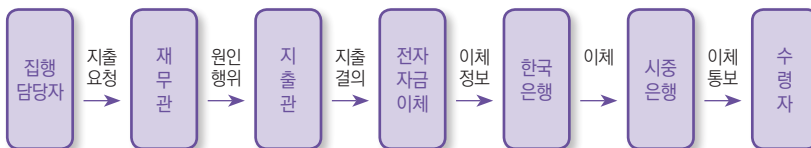
Q4 국고금의 지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출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지출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국고에서 관리되고 있는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행정부에서 편성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로 예산 배정하고, 부처에서는 부서별로 예산 재배정 이후 실무자가 실제 지출할 수 있게 됩니다.

집행담당자가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재무관에게 지출요청을 하고, 재무관은 지출과 관련된 행위(지출원인행위)를 합니다. 지출관은 지출원인행위를 근거로 지출결의를 하고 이체처리를 합니다. 이때 전자자금이체를 통해 한국은행 국고에서 시중은행에 통보되고 다시 수령인에게 지급되면 지출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국고금의 지출절차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연계된 국고금 실시간 계좌이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
절차는 dBrain을 통해
연계 처리

그림 2. 국고금 지출 절차



Q5 국고금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국고금 관리란 국고금의 조달과 지출 등 세입세출 예산의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관리를 말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국고금 조달되는 시기가 다르고, 지출도 일정과 달리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함으로써 재정활동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고여유자금 부족 시
재정증권 발행이나
한국은행 일시차입으로
자금조달**Q5.1** 국고금 관리 원칙이 있나요?

국고금 관리는 크게 네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첫째,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예산 배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국고금을 집행하며, 집행결과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고금은 시의적절하게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고금은 시기별 지출규모를 고려해서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계획에 따라 지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출이 계획보다 더 많이 발생하면 국고 잔액 부족으로 집행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유동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고여유자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고여유자금이 국고금에서 목표로 하는 잔액을 초과하는 자금은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에서 안전한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고금의 입출금과 회계처리는 dBrain을 비롯해 국방통합재정정보 시스템에서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Q5.2 국고금 통합관리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국고금 수납을 원활하게 조절하고, 지출에 필요한 내부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계·계정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에는 구분되어 관리되어 오다가 2005년 7월 이후부터 한국은행에 일반회계와 16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통합계좌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통합계정에서 제외됩니다.

Q6 국고여유자금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국고에 여유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통해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재정증권은 기획재정부 국고국에서 발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필요시 월별 발행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증권은 통상 1개월에서 3개월물 위주의 단기증권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율 및 조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차입금리는 전분기 말월

통화안정증권(91일물) 유통금리에 0.1%p 추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고금 일시차입은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재정증권을 통한 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국고금 일시차입 차입한도는 2011년까지 15조 원에서 2012년 20조 원으로 상향되었고, 2013년 이후로는 30조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고 차입한도 잔액은 2015년 22.0조 원이었다가 2016년에는 15.9조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재정증권은 4월 1.0조 원 발행된 이후 세수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표 1〉 국고금 일시차입 추이

(단위: 조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차입한도		15.0	20.0	30.0	30.0	30.0	30.0
최고 차입 실적	합계	8.0	19.2	28.5	20.5	22.0	15.9
	재정증권 발행	2.0	8.2	9.0	12.0	12.0	6.9
	한국은행 일시차입	6.0	11.0	19.5	8.5	10.0	9.0

※주: 합계는 연중 최고 차입일 기준 잔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 국고금
운용수익은
1,259억 원,
차입 이자비용은
555억 원

Q7 국고금 운용에 따른 수익과 조달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운용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며,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금운용의 수익은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안증권 매매를 통한 수익과 금융회사 예치 또는 단기 대여를 통한 수익 등에서 발생합니다. 국고금 운용수익 현황을 보면 2012년 이후 적자를 기록하다 2016년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2016년 국고금 운용수익은 1,259억 원이었고, 차입 이자비용이 555억 원으로 704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표 2〉 국고금 운용수익 현황

(단위: 억 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고금 운용수익 (A)	1,996	1,118	333	483	545	1,259
차입 이자비용 (B)	363	1,815	2,644	1,850	1,308	555
운용 수지 (A-B)	1,633	-697	-2,311	-1,367	-763	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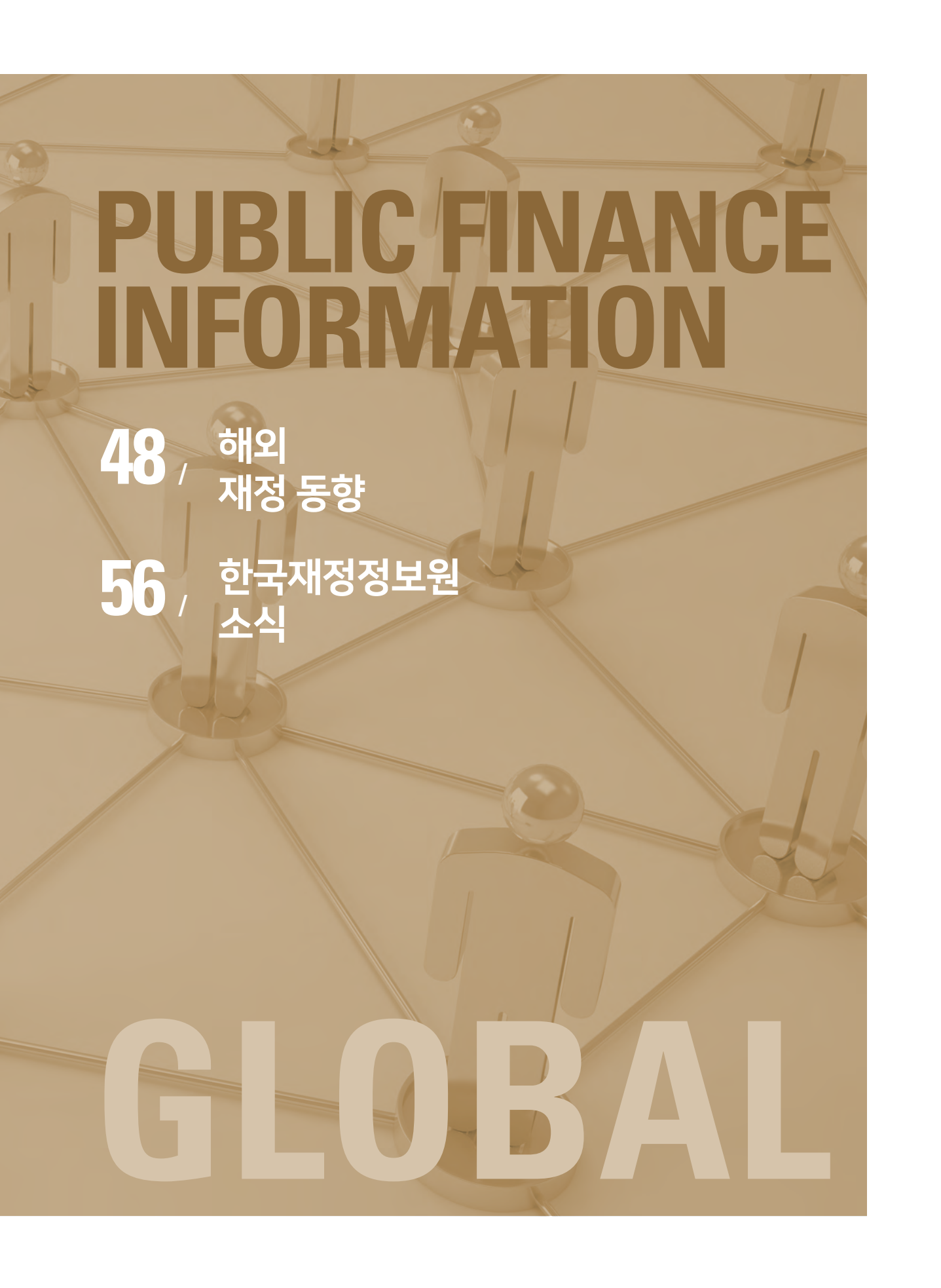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MONTHLY

동향과 소식

GLOBAL FISCAL TRENDS & KPFIS NEWS

해외 재정 동향과
한국재정정보원의 새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PUBLIC FINANCE INFORMATION

48 / 해외
재정 동향

56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GLOBAL



해외 재정 동향

해외 재정 동향

스웨덴, 경제·재정 성과와 전망

- The Swedish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uthority¹⁾, Strong GDP growth but low net lending in the public sector (2017.11.17.)

● 경제 전망

- ▶ (경제성장률) 경제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은 2017년 2.9%에 달할 것이나, 2019년부터는 GDP, 고용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 (통화정책) 2018년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통화정책은 긴축기조
- ▶ (재정정책) 재정지출 증가, 조세감면 등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나 경제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근로세, 소비세 등 주요 세원의 증가세가 둔화 될 것으로 예상
- ▶ (고용) 2017년 서비스부문과 공공부문의 취업자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고용은 개선되었고, 실업률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6.4%로 저점을 기록한 후 2021년 경기 약세와 노동시장 내 이민자 증가로 실업률 증가 예상
 - 이민자의 실업률이 스웨덴 출생자의 실업률보다 유의미하게 높음
- ▶ (임금) 노동공급 부족과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임금 상승 예상

● 재정수입 및 지출 전망

- ▶ 재정수입, 지출 모두 완만히 증가하여 재정수지 흑자 상태이나 흑자 목표 달성은 어려움
 - 2017년 재정수지 흑자는 42억 크로나
 - 재정수지 흑자 목표는 2018년까지 GDP 대비 1%이며, 2019년 이후 0.33%로 하향조정
- ▶ (수입) 2016~17년 근로소득세, 부가세 수입의 증가로 정부수입이 늘어났으나 향후 세금감면 및 경기둔화로 재정수입 증가세 약화 예상
 - 2018~2020년에 걸쳐 시행될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세금감면이 수입감소의 주요원인으로 작용
- ▶ (지출) 2015년 난민 유입에 따른 지출 증가로 2016년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했고, 2018년 투자지출 증가와 환경, 교육, 보건분야 재정지출이 증가할 전망
- ▶ 임금과 물가 상승, 난민 유입으로 인한 인구증가 등 거시경제 요소가 향후재정지출을 증가시킬 것

【작성】

박정수 부연구위원
mymajesty@kpfis.kr

강나연 연구원
nykang@kpfis.kr

1) 스웨덴 재정관리청





해외 재정 동향

〈표 1〉 중앙정부 재정수입

(단위 : 10억 크로나)

	2015 실적치	2016 전망치	2017 전망치	2018 전망치	2019 전망치	2020 전망치	2021 전망치
근로세	1,049.8	1,141.7	1,198.5	1,236.3	1,277.4	1,316.0	1,355.3
직접세	558.3	610.7	640.0	656.9	676.2	693.8	713.2
간접세	491.5	531.0	558.4	579.4	601.2	622.2	642.1
자본세	245.0	243.8	249.7	246.4	245.2	259.2	267.9
소비세	507.9	539.0	565.9	586.9	607.2	627.8	647.8
미장수세금 및 기타	7.0	16.7	14.5	16.0	16.5	13.1	13.3
미장수세금	-4.3	-4.7	-4.5	-4.2	-4.0	-3.8	-3.6
기타	11.3	21.4	19.0	20.2	20.5	16.9	16.9
총세입	1,809.6	1,941.3	2,028.5	2,085.5	2,146.2	2,216.2	2,284.2
유럽연합세	6.3	6.1	6.6	6.7	7.0	7.3	7.7
일반정부세입	1,803.3	1,935.2	2,021.9	2,078.8	2,139.3	2,208.9	2,276.5
지방정부세입	651.7	688.4	719.6	742.3	769.5	795.8	821.3
노령연금	224.1	234.1	244.6	254.8	263.8	272.5	281.3
미지급금	-33.6	31.2	-15.1	-26.4	-0.2	-2.5	-2.6
중앙정부 재정수입	893.9	1,044.0	1,042.6	1,055.3	1,105.9	1,138.1	1,171.3

〈표 2〉 중앙정부 재정지출

(단위 : 10억 크로나)

	2015 실적치	2016 실적치	2017 전망치	2018 전망치	2019 전망치	2020 전망치	2021 전망치
이전지출	605.8	622.9	648.4	675.9	683.5	696.3	692.6
가계	304.0	303.3	304.9	312.7	317.2	322.7	326.6
지방정부	164.8	183.9	208.1	207.5	202.4	204.3	199.6
기타 국가	75.9	61.5	58.6	75.0	81.1	83.0	84.2
기업	34.0	45.2	48.0	51.9	53.9	56.6	51.6
비영리기관	4.6	4.4	4.7	5.1	5.3	5.5	5.3
사회보장 기금	22.5	24.7	24.0	23.8	23.6	24.4	25.3
소비	221.4	234.0	239.1	249.2	254.3	261.2	264.9
급여	122.0	128.5	133.7	141.3	143.9	148.4	151.0
비용	67.2	69.7	70.4	73.6	75.7	77.3	77.8
주택임차료(수선 충당금 포함)	17.4	18.0	19.1	20.1	20.4	20.9	21.3
비급여성 복리후생	14.8	17.8	15.9	14.1	14.3	14.5	14.8
투자	28.8	30.5	32.6	35.0	35.3	35.4	36.2
금융거래	33.4	13.5	23.6	25.8	39.5	33.7	25.6
이자지출	23.3	2.9	12.2	13.9	27.5	21.2	12.9
기타	10.1	10.7	11.3	11.8	12.1	12.5	12.7
지출부문 합계	889.3	900.8	943.6	985.9	1,012.6	1,026.7	1,019.3
현금보정	-7.3	1.8	5.4	1.9	0.0	0.0	0.0
국가채무청의 순융자	10.1	14.8	2.8	5.7	-4.5	3.8	3.8
총지출	892.2	917.4	951.8	993.5	1,008.1	1,030.4	1,023.1

● 채무 전망

- ▶ 2017, 18년 일반정부 순융자(net lending)가 발생하나 확장적 재정정책조로 융자폭 축소 예상
- ▶ 재정수지 흑자는 총 공공부문 채무(국가 및 지방 채무)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켰으며, 2016년 42%인 GDP 대비 채무 비중을 2019년 35%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
- ▶ 현재 스웨덴 정부는 재정지출 상한을 준수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준수 가능함



해외 재정 동향

OECD, 프랑스 경제보고서 발간

- OECD, OECD Economic Surveys France(2017.9.14.)

● 경제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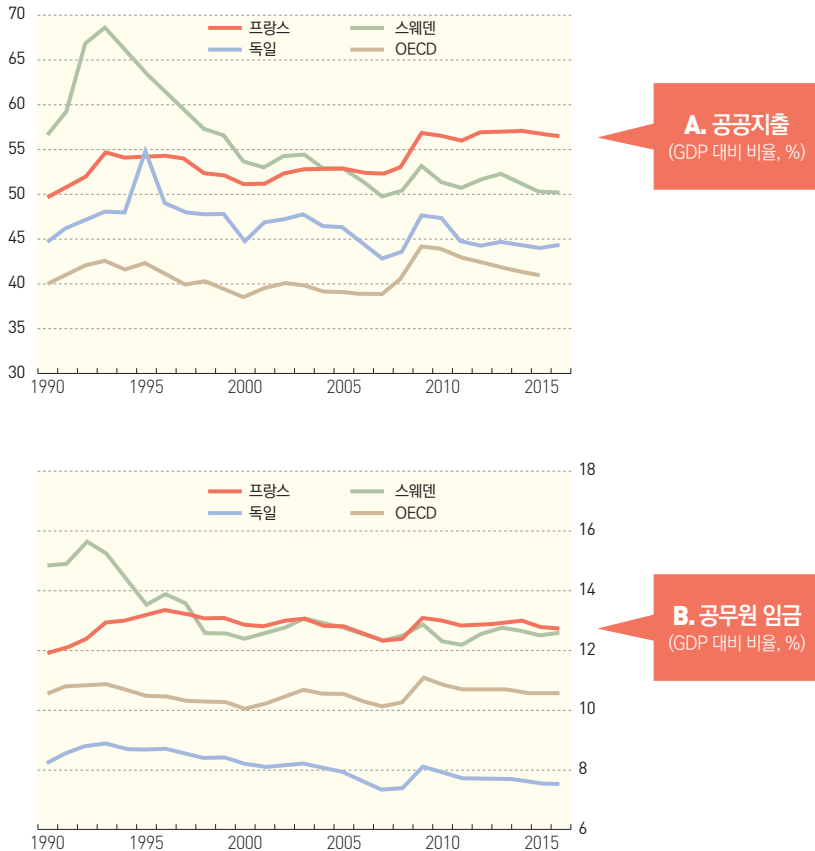
- ▶ (경제성장률) 2017~18년 민간소비와 투자 증가로 1.6% 증가 예상
- ▶ (수출) 2016년 한시적으로 급감하였고, 영국의 브렉시트, 중국 등 신흥시장의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향후 수출전망은 무역상대국 수요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임
- ▶ (물가)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7년 에너지 가격이 회복되면서 상승하였으나 추가적 물가상승 압력은 낮음
- ▶ (임금) 실질임금 증가세는 더디지만 노동시장 회복세가 소비를 뒷받침함
- ▶ (재정) 재정적자는 감소추세이나, 조세감면이 재정수입 증가를 제약하고 있으며, 대테러 안보지출과 같은 재정지출 증가 등 위기요소가 상존
 - 기준선 시나리오 하에서 채무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예상되는 금리인상과 함께 채무 증가세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재정전략이 필요

● 지속적인 지출 감축

- ▶ 2016년 프랑스의 재정지출은 GDP 대비 56.4%로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므로, 공공지출과 채무를 감축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이 요구됨
- ▶ GDP연동 연금지출의 축소, 공무원 임금 삭감, 재정지출 효율화 등의 장기 전략은 고용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음
 - 재정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늘어난 기대수명에 맞춰 은퇴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적합
 - 두 개의 민영 직업연금(AGIRC, ARCO)을 하나로 통합하여 노동이동성을 높이고 연금 관리비용을 낮출 수 있음
- ▶ 공무원 임금은 OECD 평균보다 높으므로 기본임금 동결을 통해 임금수준을 낮추고, 향후 5년간 중앙·지방 공무원 12만 명을 감원하는 등 중앙정부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인건비 지출을 감소시킬 것
 - 현재 공무원은 560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 중 20%를 차지
- ▶ 지방정부간 기능이 중첩되어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지속적 간소화를 통해 프랑스 공공부문 총지출의 20%를 차지하는 지방정부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음



그림 1. 정부 규모 비교



● 의료 보건의 효율성과 형평성 개선

- ▶ 프랑스의 보건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가 보건시스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 농가 및 도시 저소득층의 기대수명이 평균보다 짧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의료서비스 제공수준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빈곤 지역에 민영 보건소를 설치 하려는 계획 수립
- ▶ 신정부는 예방치료를 권장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홍보하여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방안을 시행중
- ▶ 주류의 과도한 매체광고 금지, 고위험군 모니터링, 불법적 판매 제재 강화와 같은 정책은 주류소비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음
- ▶ 주류세 인상, 탄산음료 소비세 개혁 등은 홍보 캠페인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해외 재정 동향

GLOBAL FISCAL TRENDS



해외 재정 동향

● 조세체계 단순화와 환경규제 구조 개선

▶ 조세체계는 빈번히 바뀌는 면세와 공제 제도 때문에 매우 복잡하며 이에 따라 높은 준법감시 및 징수비용을 유발함

- 프랑스 기업은 233종류의 세금 적용을 받음

▶ 목적세인 사회보장기여금(earmarked social contribution) 비중 축소가 조세체계를 더 단순하고 고용 친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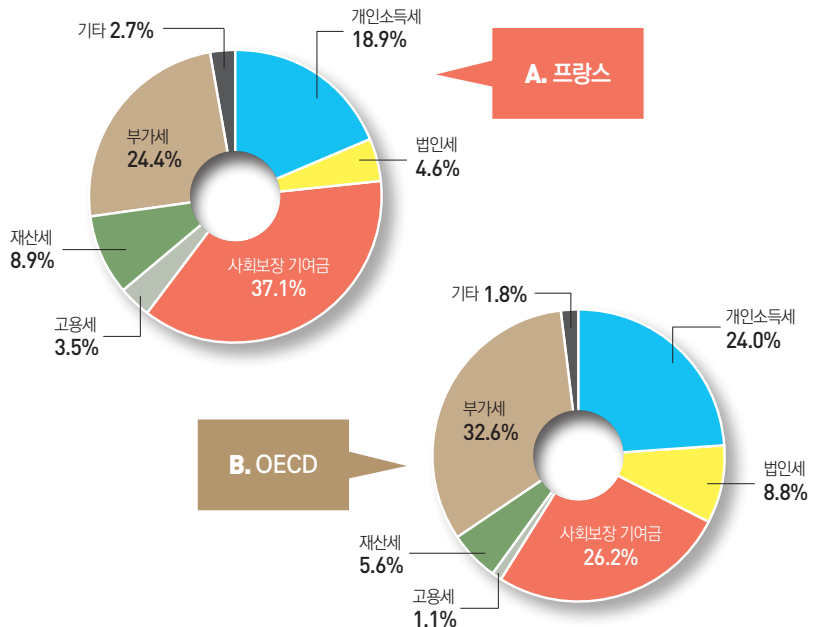
- 재정수입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labour taxes)가 주로 사회보장기여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며 근로의욕 및 고용을 감소시킴

▶ 정부는 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금 축소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입 감소를 개인소득세를 높여 보전할 계획이나, OECD는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 축소 등 누진 개인소득세²⁾ 비중을 높일 것을 권고

- 자본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세율인하가 필요

▶ 현재 환경세는 OECD 평균에 비해 낮기 때문에 환경세 인상으로 재정수입을 보전하고 환경문제도 완화할 수 있음

그림 2. 2015년 세입구조



2) 프랑스의 개인소득세는 비례세와 누진세로 구성되며, 가계 중 42.8%만이 누진 개인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비해 비례 개인소득세는 더 넓은 세원과 세수를 확보하고 있음. 누진세가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인 만큼, 여타 OECD 국가보다 조세시스템이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바가 적음

영국, 경제·재정 전망 보고서 발간

-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³⁾,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11.22)

● 2017년 3월 경제 여건⁴⁾

- ▶ 2016년말부터 2017년 3분기까지 경제성장률은 0.9%였고 이는 2017년 3월 전망보다 0.2%p 낮은 수준으로 2016년보다 성장세가 둔화
- ▶ 유로지역 및 미국, 캐나다, 일본의 분기 성장률은 2016년 하반기보다 더 상승했으며, 영국 (분기 성장률 0.3%)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 영국 경제성장률 둔화는 여타 선진국 경기호조와 대비됨
 - 2017년 영국 분기성장률은 0.3%이며, 2016년 하반기 0.5%에 미치지 못함
- ▶ EU탈퇴 국민투표 이후 파운드가 가치 하락으로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확대되어 가계의 실질 소득 및 지출을 감소시킴
- ▶ 고용여건은 개선되어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취업자 수는 23만 명 증가, 3월 전망치보다 2배 이상 높았음

● 경제 전망

- ▶ 잠재GDP 성장률은 2022년(전망기간 말)까지 연간 1.5% 수준 내외에서 유지될 것
 - 전망기간 내 인구증가율은 연간 0.5%, 균형고용률과 평균근로시간은 현재 수준을 유지, 잠재생산성은 2018년 1.3%에서 2022년 1.5%까지 증가하여 연평균 1.5%의 잠재GDP 성장률 기대
- ▶ 재정지출 삭감과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률은 2017년 1.5%에서 2019년 1.3%로 점차적으로 둔화됨
- ▶ 소비자물가는 2017년 4분기에 정점에 달한 후 정부 목표인 2% 수준으로 점진적 하락하고 주택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3%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3) 영국 예산책임청

4) 최신 경제·재정 전망이 2017년 3월 발간되어 그 이후 변화한 경제여건을 설명



해외 재정 동향



해외 재정 동향

〈표 3〉 경제전망

	전년 대비 %변화						
	2016 실적치	2017 전망치	2018 전망치	2019 전망치	2020 전망치	2021 전망치	2022 전망치
현재 시장 가격기준 아웃풋							
GDP	1.8	1.5	1.4	1.3	1.3	1.5	1.6
1인당 GDP	1.0	0.9	0.8	0.7	0.7	0.9	1.0
GDP levels(2016 = 100)	100.0	101.5	103.0	104.3	105.7	107.2	108.9
아웃풋 갭	-0.2	-0.2	-0.1	-0.2	-0.2	-0.1	0.0
실질GDP 구성							
가계소비	2.8	1.5	0.8	1.2	1.2	1.5	1.6
일반정부 소비	1.1	0.3	1.0	0.7	0.5	1.0	1.0
기업 투자	-0.4	2.5	2.3	2.3	2.4	2.4	2.4
일반정부 투자	1.5	2.4	1.4	2.3	6.2	1.1	0.9
순수출	-0.9	0.4	0.2	0.0	0.0	0.0	0.0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	0.7	2.7	2.4	1.9	2.0	2.0	2.0
노동시장							
고용(백만)	31.7	32.1	32.3	32.4	32.5	32.6	32.7
평균 소득	2.8	2.3	2.3	2.3	2.6	3.0	3.1
3월 전망 이후 변화							
현재 시장 가격기준 아웃풋							
GDP	0.0	-0.5	-0.1	-0.4	-0.6	-0.5	
1인당 GDP	-0.1	-0.4	-0.1	-0.4	-0.5	-0.4	
GDP levels(2016 = 100)	0.0	-0.5	-0.6	-1.0	-1.6	-2.1	
아웃풋 갭	-0.2	-0.4	0.0	-0.1	-0.1	-0.1	
실질GDP 구성							
가계소비	-0.2	-0.3	-0.1	-0.5	-0.5	-0.4	
일반정부 소비	0.2	-0.8	0.3	0.3	-0.4	-0.3	
기업 투자	1.1	2.5	-1.4	-1.9	-1.4	-1.2	
일반정부 투자	0.1	2.3	0.2	0.2	0.2	-2.7	
순수출	-0.6	0.1	-0.1	0.0	0.0	0.1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	0.0	0.3	0.0	-0.1	0.0	0.0	
노동시장							
고용(백만)	0.0	0.2	0.2	0.2	0.2	0.2	
평균 소득	0.6	-0.3	-0.4	-0.6	-0.8	-0.6	

● 재정전망

- ▶ 공공부문 순차입은 2009-10년 GDP 대비 9.9%에서 2016-17년 2.3%로 감소하였고, 2017-18년에는 지난해 대비 42억 파운드 증가한 499억 파운드로 예상
- ▶ 재정적자는 2017-18년 소폭 상승하고 2018-19년에는 GDP 대비 2% 미만 수준으로 축소 후 2022-23년까지 지속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전망
- ▶ 재정지출 소요 증가로 2022년까지 순차입 증가 예상
 - 브렉시트 관련 지출 증가, 건강보험(National Health System, NHS)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 증가, 주거대책 관련 자본지출 증가, 주택 생애 최초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도입 등
- ▶ 세금감면, 재정지출 감축의 완급조절 등으로 2018-19년 27억 파운드 추가차입이 있을 것이며 2019-20년에는 92억 파운드(GDP 대비 0.4%규모) 정도의 추가차입이 예상됨

〈표 4〉 재정전망

	GDP 대비 비율(%)						
	2016-17 실적치	2017-18 전망치	2018-19 전망치	2019-20 전망치	2020-21 전망치	2021-22 전망치	2022-23 전망치
수입 및 지출							
공공부문 수입	36.7	36.5	36.6	36.7	36.7	36.6	36.7
총운용 지출	39.0	38.9	38.5	38.3	38.2	37.9	37.7
경기조정 재정수지준칙							
경기조정 순차입	2.2	2.3	1.8	1.5	1.3	1.2	1.1
공공부문 순차입	2.3	2.4	1.9	1.6	1.5	1.3	1.1
경기조정 재정적자	0.2	0.3	0.0	-0.5	-1.1	-1.1	-1.3
추가 채무준칙							
공공부문 순채무	85.8	86.5	86.4	86.1	83.1	79.3	79.1
10억 파운드							
수입 및 지출							
공공부문 수입	726.7	745.4	769.8	792.0	817.2	841.6	871.3
총운용 지출	772.4	795.3	809.3	826.7	849.9	871.7	896.8
경기조정 재정수지준칙							
경기조정 순차입	43.0	48.0	37.9	32.3	29.7	28.1	25.0
공공부문 순차입	45.7	49.9	39.5	34.7	32.8	30.1	25.6
경기조정 재정적자	4.3	6.2	0.0	-11.8	-24.0	-25.4	-29.9
추가 채무준칙							
공공부문 순채무	1727	1791	1840	1885	1879	1853	1909

● 재정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

- ▶ 예산책임청은 구조적 재정적자, 공공부문 순차입, 복지지출 목표를 모두 달성할 것으로 평가
- ▶ (구조적 재정적자) 2017-18년 GDP 대비 2.3%에서 2020-21년 1.3%까지 축소하여 구조적 재정수지 목표인 GDP 대비 2% 이하를 달성 가능함
- ▶ (공공부문 순차입) 2020-21년 GDP의 3%만큼 하락하여 순차입 목표인 GDP 대비 1%를 달성할 수 있음
- ▶ (복지지출) 2021-22년 마진을 포함한 복지상한(welfare cap)보다 25억 파운드 낮아 재정 목표 달성 가능함
 - 복지지출 마진은 불가피한 복지지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3%로 설정
 - 2021-22년 마진을 포함한 복지상한은 1,297억 유로로 설정되어 있으며 1,272억 유로로 전망
- ▶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출이 증가하면서 2025-26년 재정목표인 균형재정 달성은 어려움



해외 재정 동향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상담센터 국가품질 KS인증 획득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12월 5일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상담센터 서비스 부문의 KS인증(KSS1006)을 획득
 - KS서비스 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사업장이 보유한 서비스 능력이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수여하는 국가인증제도임
- 이번 인증을 계기로 더욱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

제5차 한국재정정보원 정보화자문위원회 개최

- dBrain운영본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dBrain 시스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22일 제5차 정보화자문위원회를 개최
- 정보화와 재정 등 서로 다른 전문분야의 자문위원들이 함께 모여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4차산업 기술의 재정분야 적용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

한국재정정보원, 라오스 재정정보화사업 추진방안 협의

- 한국재정정보원은 11월 29일 라오스 재무부 최고 의사결정권자와의 면담을 통해 라오스 재정정보화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
-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으로 라오스 재정정보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의 특·장점 설명하고, 한국정부와 세계은행 간 재정정보화 사업 공동 수행에 관한 논의를 진행



일자리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 한국재정정보원은 우리원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11월 30일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일자리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
- 간담회에서는 향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개진된 의견들은 향후 일자리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



사랑의 빵 나눔 사회공헌활동 실시

- 한국재정정보원 직원들은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12월 7일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
- 직원들이 직접 제빵에 참여하여 만든 빵 500여 개는 봉사센터에 기증하였으며, 한국재정정보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할 예정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KPFIS NEWS



dBrain 10주년 기념 재정혁신 국제 콘퍼런스 개최

- dBrain 운영 10주년을 기념하는 재정혁신 국제 콘퍼런스가 12월 14~15일 양일 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오키드룸(2F)에서 개최됨
-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이 주관한 이번 콘퍼런스는 '지속가능 사회와 재정운용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가운데,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개회사를 뒤이어 WB(World Bank)의 마흐무드 모히엘딘(Mahmoud Mohieldin) 수석 부총재와 IMF 비터 가스파(Vitor Gaspar) 재정부문 국장의 기조 발제로 시작
- 14일에는 ▲4대 재정개혁과제의 성과 점검,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와 성과, ▲사람 중심 경제구현을 위한 재정혁신 과제 등의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15일에는 ▲바람직한 재정혁신의 방향 및 장애요인 극복 방안에 관한 종합토론을 진행
-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내·외 재정분야의 전문가 및 개도국 연수단 등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앞으로도 한국재정정보원은 국내·외 재정분야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미래 재정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

KPFIS NEWS

월간
**나라
재정** 2017년 12월호 통권 제12호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이원식(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편집위원장	박용주(한국재정정보원 연구본부장)
편집위원	강영규(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장) 최병호(부산대학교 교수) 이원희(한경대학교 교수) 연훈수(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 박소영(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한승희(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김도일(한국재정정보원 연구원)
------	------------------

디자인·제작	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	----------------------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